



가계부채의 현황 및 평가

이혜은 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도 취약해지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손꼽히며 불안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음.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에 근접하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가계대출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 가계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나, 세계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거시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가계부실이 확산되면서 복합적으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충분함. 따라서 가계부채의 조정과 적정수준 관리를 위한 가계, 금융기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올해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심각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연착륙할 것이라는 분석이 혼재되어 있음.
-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되면 민간소비 위축 및 금융불안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2011년 12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2012년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음.
-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면 가계부채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함.
 - 그 근거로 2002년 이래 도시 근로자의 소득 대비 대출이자 비중이 2%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들었음.
 - 또한 우리나라 가계의 가장 큰 부담은 대출이자 비용이 아니라 지난 20년에 걸친 세금 인상과 교육비 지출이라고 지적함.

■ 2월 22일 발표한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4/4분기 말 현재 912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으며, 비은행 예금기관과 보험·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이 은행대출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분기 대비 22조 3천억 원 늘어나 2010년 4/4분기 27조 8천억 원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됨.
-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진정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상호금융(4조 9천억 원 증가), 보험(2조 3천억 원 증가) 등 비은행 예금기관과 기타금융기관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함.
 - 이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은행권 대출이 억제됨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비은행권 대출로 옮겨가 이들 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가계부채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정책당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그림 1〉 가계부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2〉 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조정이 이루어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주요국 중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 신용카드 사태(2002년) 직후인 2003, 2004년을 제외하고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를 상회하였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157.6%)은 영국(165.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된 미국(124.3%)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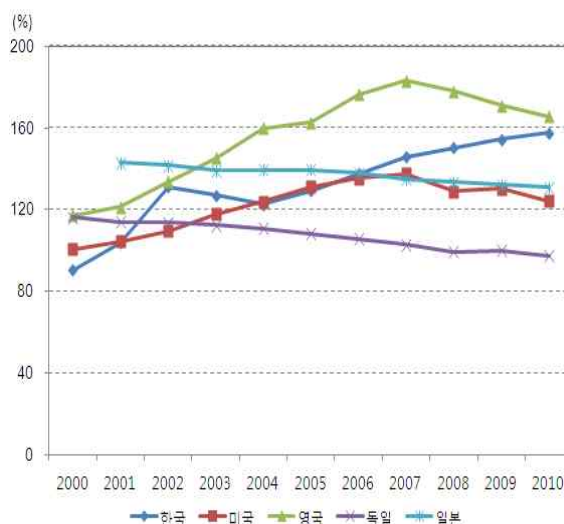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은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여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림 3〉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4〉 주요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 각국 국민계정 및 자금순환표.

■ 카드사태 이후 가계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상환여력이 악화되긴 하였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임.

● 상환능력이 있는 중상위 소득계층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절반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음.

– 국내 가계부채는 대부분을 중상위 소득계층(3~5분위)이 보유하고 있고 이들 주 채무계층의 채무 상환능력은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직전(2007년)의 미국보다 양호한 편임.¹⁾

1) 우리나라(2010년 가계금융조사 기준) 전체 가계부채 중 3~5분위의 보유비중은 87%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2007년)의 미국(90%)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들 중상위소득계층의 원리금상환부담률(DSR)은 2007년 당시 미국보다 평균 2배 정도 낮은 수준임. (1분위 DSR-한국(20%), 미국(19%), 2분위 DSR-한국(15%), 미국(17%), 3분위 DSR-한국(12%), 미국(20%), 4분위 DSR-한국(9%), 미국(22%), 5분위 DSR-한국(9%), 미국(16%)), 한국은행(2011. 10), 「금융안정보고서」.

- 2월 28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석동 위원장은 “가계대출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 가계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함.

–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상호금융과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함.²⁾

■ 하지만 최근 거시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충격이 강하게 발생할 경우 가계부실이 확산되면서 복합적으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세계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거시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함.
-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형 단기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리 상승에 취약하며,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원금상환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 또한 부동산가격 하락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금융권에 신용 또는 유동성 경색이 유발될 수도 있음.
- 가계부채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경우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 기능이 무력해질 수 있음.
- 가계부채의 조정과 적정수준 관리를 위한 가계, 금융기관, 정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함. **kiri**

2) 금융감독원은 2012년 2월 27일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하여 제2금융권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통해 실물경제와 균형 잡힌 가계부채 증가를 도모하려고 함.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80% 이내로 운용하기로 했으며, 보험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은행 수준으로 강화함. 또한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를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금융감독원 보도자료).